

제254회 연제구의회

안전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차(부록)

연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3 면
2. 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7 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3 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안 검토보고서 21 면
5.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7 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32 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8 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4 면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3.

안전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안효정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제395호

나. 제출일자: 2024년 8월 27일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8일

라. 발의의원: 김미화(대표발의), 권종현, 권성하, 김현규, 소수련, 변준호,
이의찬, 정홍숙 (8명)

2.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연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 환경 개선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적용 범위 및 관리 책임(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작업구 정비계획 수립(안 제6조)

마. 작업구의 점검 등 및 유지·관리(안 제7조 ~ 안 제8조)

바. 작업구의 정비공사 및 긴급정비(안 제9조 ~ 안 제10조)

사. 기존 작업구의 이전 및 안전관리(안 제11조 ~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4. 8. 28. ~ 2024. 9. 2.)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연제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및 보행환경을 도모하고자 김미화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 국토교통부의 훈령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2015. 9. 1. 제정)>의 유효기간이 2023. 12. 31.까지로 실효되고 현재까지 개정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어 업무추진을 위한 작업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적용범위 및 관리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작업구의 점검 등 및 작업구의 유지·관리,
 -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작업구의 정비공사 및 작업구의 긴급정비,
 -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는 기존 작업구의 이전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규정함.
-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 기관: 12개 기관 ▶광역시 1, 기초 11

() : 조례 제정일자

○광역시: 제주(16.3.16.)

○기초: 부산 2(영도 21.6.30., 동 24.2.15.), 인천 1(계양 21.7.2.), 대전 1(서 20.10.19.), 경기 5(수원 16.8.12., 안양 16.11.10., 성남 22.10.31., 동두천 24.2.8., 남양주 24.4.4.), 충남 1(당진 22.4.15.), 전남 1(여수 22.12.30.)

붙임

관계법령

도로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7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 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9. 생략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 지방도
- 시도
- 군도
- 구도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 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

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 · 보도 · 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 · 교량 · 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 · 배수로 · 길도랑 · 지하통로 및 무넴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 · 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 · 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 ·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송유관 · 전기관 · 전기통신관 · 송열관 · 농업용수관 · 작업구 (맨홀) · 전력구 · 통신구 · 공동구 · 배수시설 · 수질자동측정시설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 압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 12. 생략

「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3.

안전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안효정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제385호

나. 제출일자: 2024년 8월 27일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8일

라. 제 출 자: 연제구청장

2. 제안이유

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시설(해맞이 연꽃센터·어울정원)의 위탁운영 기간의 만료(2024. 11. 30.)가 예정됨에 따라 자생적인 주민 주도조직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시설물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연제구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해맞이 연꽃센터	연제구 거제동 676-288번지 (화지로52번길 10)	1개동, 지상3층 연면적 199.37㎡	
해맞이 어울정원	연제구 거제동 765-8번지 일원	부지 면적 567㎡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시설물(부지, 건물, 비품, 부대시설 등) 일체 운영·관리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2년(2024. 12. 1. ~ 2026. 11. 30.)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방법: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다. 위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
-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별표4]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제4동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조성한 거점시설 (해맞이 연꽃센터·어울정원)의 위탁기간이 2024. 11. 30.자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별표4],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2.)에 의거 시설물 일체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여야 하는바 의회(안전환경위원회 소관)에 제출된 것으로
- 본 동의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위탁대상 사무의 필요성 등이 타당하며,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축적된 사업추진 역량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⑤ 생략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생략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시행 2022. 12.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일부개정]

-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 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1. ~ 5. 생략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가. 생략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②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7. 생략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11.] [조례 제1102호, 2022. 10. 11., 일부개정]

제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0.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2.] [조례 제1196호, 2023. 12. 22.,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이하면서 예산이 1억원 이하인 사무는 제외하되, 예산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사무는 위탁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Ⅲ. 마을조합 공공지원

- 공공시설 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위탁
 -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해당 지역여건에 맞게 마을 조합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고, 이에 따른 위탁경비 지원 및 필요 시 조례 개정
 - 「공유재산법」의 도시재생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방안 및 마을조합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3.

안전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안효정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제396호

나. 제출일자: 2024년 8월 27일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8일

라. 발의의원: 김기준(대표발의), 김현규, 권종현, 최홍찬, 김미화 (5명)

2. 제안이유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등 필요한 조치 및 이에 필요한 비용 징수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

나. 조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도로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8. 28. ~ 2024. 9. 2.)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면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와 규격이 있으며, 당초 레저용 수단에서 친환경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며 대중화되고 있음.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이며, 사망자수 24명, 부상자수 2,622명으로 전년(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사람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46.0%로 집계되며 이는 전체 차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18.7%)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차종에 비해 차대사람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반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공작물 충돌이나 전도, 도로 이탈 등 단독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고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치사율도 5.6으로 높게 나타남.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수(명/100건)

[표1]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전년대비 증감
사고건수(건)	2,386	2,389	3 (0.1%)
사망자수(명)	26	24	-2 (-7.7%)
부상자수(명)	2,684	2,622	-62 (-2.3%)

[표2]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고유형별 현황 <자료=한국도로교통공단(2024.8.5.보도자료)>

구분	전체 차종				개인형 이동장치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협길 건물목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협길 건물목
사고건수(건)	36,996	152,935	8,363	2	1,099	1,021	269	0
구성비(%)	18.7	77.1	4.2	0	46.0	42.7	11.3	0
사망자수(명)	859	1,041	650	1	3	6	15	0
구성비(%)	33.7	40.8	25.5	0	12.5	25.0	62.5	0

-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각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관리’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24년 8월 현재 총 167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부산 10개 구·군 제정, 우리구 2023. 9. 27. 제정).
- 상위법률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현행 법령체계 및 법령의 위임 안에서 보행자 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등 조치 근거 마련이 절실한 실정으로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7조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7조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도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견인비용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구도 부산광역시 견인비용** 등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임.

**필요한 비용 산정 부산광역시 조례 준용: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 (참고사항) 타 지자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용 등 현황

서울: 40,000원, 대구: 수거료 8,000원(최초 30분 200원~500원, 매10분 100원~250원)

인천: 20,000원, 광주: 15,000원, 대전:30,000원

*제21대 국회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0. 9. 17.),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이었다가 2024. 5. 29. 임기만료폐기됨.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4. 6. 27., 의안번호 10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4. 7. 1., 의안번호 1222)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붙임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67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략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 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 18. 생략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 34. 생략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 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생략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32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2.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1.] [행정안전부령 제507호, 2024. 7. 31., 일부개정]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

[제2조의2에서 이동 <2022. 4. 20.>]

도로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7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거한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① 생략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적치물 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생략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6. 15.] [조례 제5026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전문개정 2014. 5. 14>

소요비용 산정기준(제2조 관련)

1. 견인요금표

구분 대상 차량	견인요금	
	기본요금(편도 5km까지)	추가요금(매 km 증가 시)
2.5톤 미만	40,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45,000원	1,400원
6.5톤 이상	50,000원	2,500원

2. 보관요금

○ 30분당 700원(보관일부터 1개월까지 부과·징수하되, 1일 15,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3. 공고비용 : 해당 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에 든 비용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3.

안전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안효정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제397호

나. 제출일자: 2024년 8월 27일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8일

라. 발의의원: 정홍숙(대표발의), 변준호, 소수련, 차성민, 최홍찬, 김현규,
권성하, 김기준 (8명)

2.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었으나 그만큼 화재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 충전구역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안 제4조)

다.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안 제5조)

라. 관계인에 대한 권고(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4. 8. 28. ~ 2024. 9. 2.)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홍숙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 최근 국내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17년 대비 2024년 7월 16.1% 증가한 반면, 전기자동차는 2017년 25,108대에서 2024년 7월 621,071대로 2,373%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 소방청의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현황’을 보면 2019년 7건에 불과하던 전기차 화재가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도 7월까지 32건이 발생하였고
- 장소별로 구분하면 189건의 화재 중 22건(11.6%)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함.
-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원인으로는 충전 중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 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온도가 급상승해 분말소화기로는 화염을 진화시키기 어려운 특징이 있고, 이에 따라 배터리 냉각을 위해 차량을 이동식 수조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등 일반 소화 방식과는 다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의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화염이 수평으로 진행(화재시 방출되는 압력 및 가연성 가스로 인함)되는 경향으로 인해 초기 진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 차량과 건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특성에 맞는 대응과 예방책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전기자동차 증가 현황, 화재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안 제5조) 및 관계인에 대한 권고(안 제6조)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돼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지며
- 본 조례안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시행 준비기간을 위해 부칙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정한 것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참고

전기차 관련 통계현황

○ 국내 자동차 등록현황

연도	차량등록 (단위:대)		
	계	내연기관	전기차
2017년	22,528,295	22,503,187	25,108
2018년	23,202,555	23,146,799	55,756
2019년	23,677,366	23,587,448	89,918
2020년	24,365,979	24,231,017	134,962
2021년	24,911,101	24,679,658	231,443
2022년	25,503,078	25,113,223	389,855
2023년	25,949,201	25,405,301	543,900
2024년 7월	26,163,162	25,542,091	621,071



【출처: 국립소방연구원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가이드(2023. 3.)> 및 국토교통 통계누리 (<https://stat.molit.go.kr>)】

○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 현황 (2019.~2024.7.)

연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단위:천원)	비고
		사망(단위:명)	부상(단위:명)		
계	189	1	15	4,866,680	
2019년	7	0	1	270,029	
2020년	11	0	0	360,740	
2021년	24	0	1	878,084	
2022년	43	0	3	913,362	
2023년	72	0	9	1,463,986	
2024년 7월	32	1	1	980,479	

【출처: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자근 의원(구미시 갑) 제공자료 ▶ 안전신문(2024. 8. 13.) 】

○ 최근 5년간 차량 장소별 전기차 화재 현황 (2019.~2024.7.)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기준)
계		189	7	11	24	43	72	32
일반도로		79	4	3	12	19	26	15
주차장	지상	45	1	3	4	12	17	8
	지하	22	1	3	3	2	10	3
공지		18	1	2	2	5	6	2
고속도로		16	0	0	1	1	5	1
기타 도로		8	0	0	1	1	5	1
터널		1	0	0	0	0	0	1

【출처: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자근 의원(구미시 갑) 제공자료 ▶ 안전신문(2024. 8. 13.) 】

붙임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생략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 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 10. 생략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 ⑦ 생략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3.

안전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안효정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제386호

나. 제출일자: 2024년 8월 27일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8일

라. 제 출 자: 연제구청장

2. 제안이유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현재 부산 광역시에서 설치·운영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종료(2024. 12. 31.) 후 구·군으로 운영주체 변경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연제구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
- 위탁기간: 3년(2025. 1. 1. ~ 2027. 12. 31.)
- 위탁조건: 위·수탁 협약서에 의함
- 소요예산: 420,000천원

(국 210,000천원, 시 147,000천원, 구 63,000천원)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 위탁사무 내용

-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 대상별 위생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어린이급식이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위탁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4.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설치·운영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 12. 31. 계약 종료 후 구·군으로 운영주체가 변경(2025. 1. 1. 시→구 업무이관)됨에 따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으로 3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자료

○ 부산광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연번	센터명	수탁기관	2024년 예산 (단위:백만원)	위탁기간	최초 위탁일	비고
		계	7,035			사회복지(300백만원) 포함 국비:시비=50%:50%
1	중구·동구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315	2022. 1. 1.~2024. 12. 31.	2016. 1. 1.	
2	서구·영도구	고신대학교(산학협력단)	420	2022. 1. 1.~2024. 12. 31.	2013.12.13.	
3	부산진구	동의과학대(산학협력단)	730	2021. 1. 1.~2025. 12. 31.	2012. 6. 1.	사회복지(100백만원) 포함
4	동래구	(사)대한영양사협회	420	2020. 11. 1.~2024. 12. 31.	2013.12.13. (2020.11.1.)	()현수탁기관 최초위탁일
5	남구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420	2022. 1. 1.~2024. 12. 31.	2013. 8. 6.	
6	북구	동인대학교(산학협력단)	600	2022. 1. 1.~2024. 12. 31.	2013.12.13.	
7	해운대구	동서대학교(산학협력단)	800	2020. 11. 1.~2024. 12. 31.	2013. 4.16.	사회복지(100백만원) 포함
8	사하구	동아대학교(산학협력단)	730	2022. 1. 1.~2024. 12. 31.	2013. 8. 6.	사회복지(100백만원) 포함
9	금정구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420	2022. 1. 1.~2024. 12. 31.	2013.12.13.	
10	연제구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	420	2022. 1. 1.~2024. 12. 31.	2013.12.13.	
11	강서구	신라대학교(산학협력단)	420	2022. 1. 1.~2024. 12. 31.	2016. 1. 1.	
12	수영구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315	2020. 1. 1.~2024. 12. 31.	2017. 9. 1.	
13	사상구	신라대학교(산학협력단)	500	2022. 1. 1.~2024. 12. 31.	2013. 8. 6.	
14	기장군	경남정보대(산학협력단)	525	2020. 11. 1.~2024. 12. 31.	2016. 1. 1.	

○ 부산광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주체 변경 및 분담비율 조정 관련 사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2020. 12. 29. 개정(2021.12.30. 시행)
시·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화(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로 변경)
- 구청장·군수협의회 결과 운영비 분담 조정 (2024. 7. 18.)
 - ▶ 지방비 중 시와 구의 분담비율 70%:30%로 조정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주체 변경 알림 및 운영 협조 요청
(시 보건위생과, 2024. 7. 30.)
 - ▶ 운영주체 변경: 부산광역시장→구청장
 - ▶ 분담비율 조정
: 2024년 국비 50%:시비 50% → 2025년 국비 50%:시비 35%:구비 15%

붙임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 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60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생략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2.] [조례 제1196호, 2023. 12. 22.,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이하면서 예산이 1억원 이하인 사무는 제외하되, 예산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사무는 위탁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3.

안전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안효정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제398호
나. 제출일자: 2024년 8월 27일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8일
라. 발의의원: 김미화(대표발의), 권종현, 권성하, 김현규, 소수련, 변준호, 이의찬, 정홍숙 (8명)

2. 제안이유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안전·위생 점검 등 및 조치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자원봉사활동 등(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4. 8. 28. ~ 2024. 9. 2.)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김미화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는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안전 및 위생 점검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어린이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리계획 수립, 안전 및 위생 점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개념 비교

◆**어린이활동공간(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시설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건축 및 일정규모 이상 증축·수선시 확인검사제도 이행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관리시스템\(www.ehtis.or.kr\)](http://www.ehtis.or.kr) 운영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기구적 요건과 장소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모래, 포설, 고무매트 등 충격흡수용 바닥재만 설치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cpf\)](http://www.cpf.go.kr/cpf) 운영

◆**어린이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참고

도시공원 현황 (조성중, 미조성 공원 포함)

구분	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가로공원
개소	33	2	13	14	2	2
면적(㎡)	200,525.5	126,630.0	26,617.6	21,188.4	18,949.5	7,140.0

구분	공 원 명	위 치	시설결정	조성계획결정	면적(㎡)	조성여부	비고
근린공원	합 계	33개소	-	-	200,525.5	-	
	소 계	2개소	-	-	126,630.0	-	
	토곡공원	연산9동 2223	건고425호(1984.11.01.) 부고2호(2021.01.06.)	건고부95호(1990.07.16.)	18,854.0 11,111.0	조성 미조성	연산5
	화지공원	거제동 산73-5	부고230호(2020.7.1.)		96,665.0	미조성	연제
어린이공원	소 계	13개소	-	-	26,617.6	-	
	어울림 공원	거제1동 1480	부고259호(1995.10.20.)	부고360호(1996.01.12.)	3,780.5	조성	
	한마음 공원	거제1동 1482-1	부고259호(1995.10.20.)	부고360호(1996.01.12.)	2,788.1	조성	
	연봉 공원	연산4동 631-6	건고2111호(1965.12.31.)	연고27호(2014.04.03.)	1,347.0	조성	
	연잎 공원	연산9동 477-1	건고10호(1973.01.31.)	연고27호(2014.04.03.)	1,588.2	조성	
	과정 공원	연산8동 407	건고10호(1973.01.31.)	연고27호(2014.04.03.)	1,946.5	조성	
	한빛 공원	연산1동 2273	부고452호(2006.12.27.)	부고353호(2007.09.12.)	1,515.0	조성	
	새싹 공원	연산6동 2132-1	건고134호(1969.12.31.)	연고15호(2008.05.21.)	619.8	조성	
	한들 공원	연산8동 2314	부고437호(2009.12.09.)	부고306호(2012.07.25.)	3,369.9	조성	
	햇살 공원	연산9동 2235-5	부고212호(1990.06.01.)	부고365호(1992.10.16.)	1,610.0	조성	
	늘푸른 공원	연산2동 789	건고2111호(1965.12.31.)	연고27호(2014.04.03.)	1,869.8	조성	
	꿈나무 공원	연산5동 1478-1	건고2111호(1965.12.31.)	연고27호(2014.04.03.)	1,665.8	조성	
	하늘빛 공원	연산2동 2350	부고329호(2005.11.16.)	연고79호(2019.9.5.)	2,591.0	조성	
	거제2주택 재개발	거제동 800 일원	부고328호(2005.11.16.)	연고86호(2015.10.21.)	1,926.0	조성중	
소공원	소 계	14개소	-	-	21,188.4	-	
	연화 공원	연산2동 1431-1	부고191호(2006.05.24.)	연고27호(2014.04.03.)	2,147.4	조성	
	연산 공원	연산동 834-34	부고143호(2007.04.11.)	부고12호(2016.02.17.)	2,717.1	조성	
	쌍미 공원	연산1동 2272	부고452호(2006.12.27.)	부고353호(2007.09.12.)	1,209.0	조성	
	옛골 공원	연산1동 2274	부고452호(2006.12.27.)	부고353호(2007.09.12.)	2,764.0	조성	
	연천 공원	연산8동 2313	부고437호(2009.12.09.)	부고306호(2012.07.25.)	1,908.0	조성	
	월륜 공원	연산9동 2309	부고25호(2012.04.25.)	부고25호(2012.04.25.)	1,044.7	조성	
	연이 공원	연산2동 2301	연고54호(2010.07.21.)	연고54호(2010.07.21.)	818.4	조성	
	강변 공원	연산9동 2318	연고30호(2014.04.17.)	연고30호(2014.04.17.)	196.8	조성	
	수련하나 공원	연산2동 2345	부고403호(2006.10.30.)	부고16호(2015.01.21.)	976.4	조성	
	수련둘 공원	연산2동 2347	부고460호(2006.12.27.)	부고16호(2015.01.21.)	1,206.5	조성	
	물만골 공원	연산2동 2349	부고460호(2006.12.27.)	부고16호(2015.01.21.)	1,319.1	조성	
	연산마루 공원	연산4동 산 136-1 일원	연고116호(2019.12.11)	연고39호(2015.01.21.)	3,629.0	조성중	
	거제2주택 재개발	거제동 643-40 일원	부고328호(2005.11.16.)	연고86호(2015.10.21.)	555.0	조성중	
	물만골지구단위계획	연산동 산176-14 일원	연고64호(2014.09.17.)	미 수 립	697.0	미조성	
체육공원	소 계	2개소	-	-	18,949.5	-	
	거제 공원	거제동 1468-1번지 일원	부고8호(2003.02.12.)	연고39호(2005.11.29.)	5,848.5	조성	
	거제2주택 재개발	거제동 785-50	부고448호(2007.11.21)	부고389호(2008.10.22)	13,101.0	조성중	
가로공원	소 계	2개소	-	-	7,140.0	-	
	가로공원	연산동 2220-2번지	부고2호(2021.01.06.)	미 수 립	1,517.0	미조성	
	가로공원	연산동 387-1번지	부고449호(2022.11.23.)	미 수 립	5,623.0	미조성	

붙임	관계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가. ~ 아.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공원녹지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 5의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의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일 것

- 나. 실외이동로봇의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이 100킬로그램 이하일 것
- 다.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속도가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일 것
- 라. 공원관리청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준수할 것
-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2. 6. 23.] [대통령령 제31805호, 2021. 6. 22., 일부개정]

-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3.

안전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안효정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제399호

나. 제출일자: 2024년 8월 27일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8일

라. 발의의원: 권성하(대표발의),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이의찬, 김현규,
김미화, 차성민, 김기준, 최홍찬, 권종헌 (11명)

2.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연제구 주민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역단을 보호하고, 방역장비구입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방역 활동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산지원에 장비구입 등 규정 추가(안 제10조제2호)

나. 예산지원에 상해보험비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호)

다. 예산지원에 작업복 구입비 규정 신설(안 제10조제4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8. 28. ~ 2024. 9. 2.) 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연제구 주민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방역단을 보호하고, 방역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방역 활동을 도모하고자 권성하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0조(예산지원) 제2호에 장비 구입비를 추가하고
 - 제3호에 상해보험가입비 신설 및
 - 제4호에 작업복 구입비를 신설하는 것으로
- 안 제10조제2호 “장비 구입비” 추가는 주민자율방역단 시비보조금 예산 집행시 친환경 최신장비 구입을 통한 방제사업 강화를 당부하고 있는 사항이며,
- 안 제10조제3호 방역활동시 안전사고 발생 대비 상해보험가입비 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 주민자율방역단 전원 자원봉사종합보험(1365)* 가입토록 권고
- 안 제10조제4호 작업복 구입비는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율방역단 보호 및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함.

*자원봉사(종합)보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보험사업(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행)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능(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7조)

※ 총무과 2024년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예산: 8,932천원(균 4,466 구 4,466)

참고

주민자율방역단 현황

○ 동 주민자율방역단 활동인원 및 방역장비 현황 (2024. 1. 1.현재)

동명	활동인원	방역장비				비고
		계	차량용연무연막기	휴대용연무연막기	휴대용분무기	
계	141	68	13	36	19	
거제1동	10	7	1	3	3	
거제2동	12	8	1	2	5	통장1명 포함
거제3동	10	4	1	3	0	
거제4동	7	6	1	5	0	
연산1동	8	5	1	4	0	
연산2동	7	3	1	2	0	
연산3동	18	4	1	3	0	
연산4동	13	8	1	4	3	
연산5동	8	6	1	3	2	
연산6동	14	9	1	3	5	통장1명 포함
연산8동	15	3	1	2	0	
연산9동	19	5	2	2	1	

○ 2023년 동별 보조금(재배정 사업) 집행실적

(단위:원)

동명	시비보조금*(206-01 재료비*) 집행실적			구비보조금(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집행실적			비고
	재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재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27,000,000	26,997,130	2,870	18,824,000	18,812,530	11,470	시비: 유류비, 장비수리비 등 구비: 간담회 등 활동보조금
거제1동	2,250,000	2,248,130	1,870	1,622,000	1,613,400	8,600	
거제2동	2,250,000	2,250,000	0	1,622,000	1,622,000	0	
거제3동	2,250,000	2,250,000	0	1,512,000	1,512,000	0	
거제4동	2,250,000	2,250,000	0	1,512,000	1,512,000	0	
연산1동	2,250,000	2,250,000	0	1,622,000	1,619,130	2,870	
연산2동	2,250,000	2,250,000	0	1,512,000	1,512,000	0	
연산3동	2,250,000	2,250,000	0	1,572,000	1,572,000	0	
연산4동	2,250,000	2,250,000	0	1,622,000	1,622,000	0	
연산5동	2,250,000	2,250,000	0	1,572,000	1,572,000	0	
연산6동	2,250,000	2,249,000	1,000	1,572,000	1,572,000	0	
연산8동	2,250,000	2,250,000	0	1,512,000	1,512,000	0	
연산9동	2,250,000	2,250,000	0	1,572,000	1,572,000	0	

*참고사항) 시비보조금(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 2023년 시비 100%(27,000천원) ⇒ 2024년 시비(12,000천원):구비=50%:50% 변경 지원

1) 206-01(재료비):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2) 302-02(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물품(재해보상비, 장제비 등)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단체)의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등

○ 2024년 상반기 동별 보조금(재배정 사업) 집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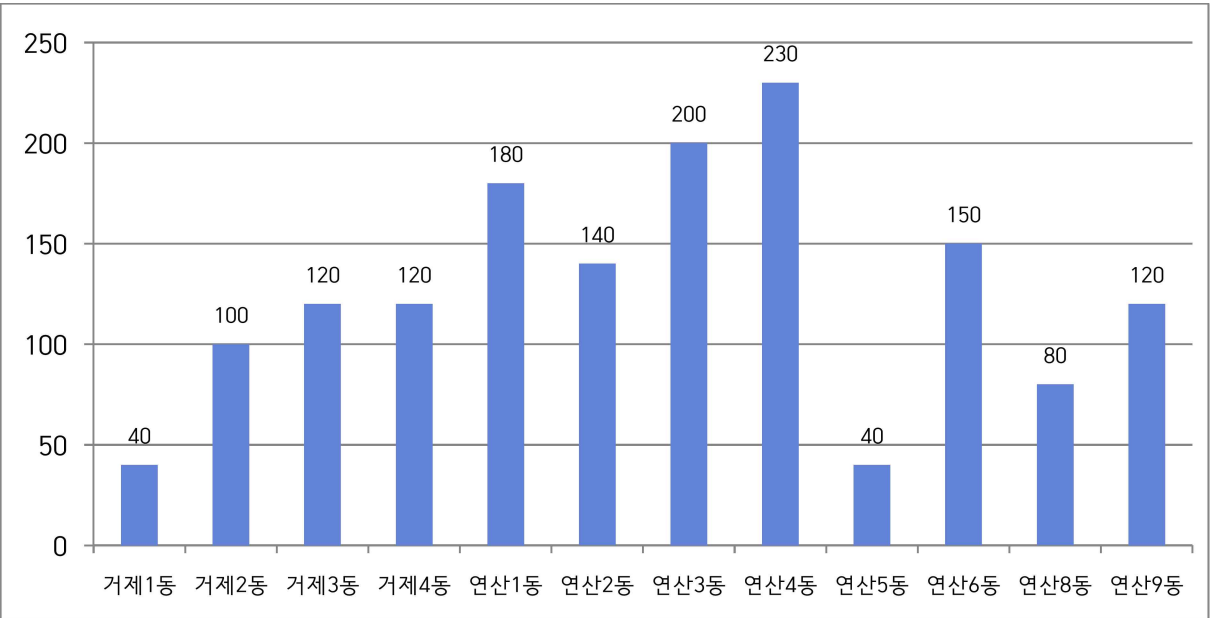
(단위:원)

동명	시비보조금(206-01 재로비) 집행실적			구비보조금(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집행실적			비 고
	재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재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12,000,000	5,297,826	6,702,174	18,824,000	4,348,020	14,475,980	시비: 유류비, 장비수리비 등 구비: 간담회 등 활동보조금
거제1동	950,000	30,000	920,000	1,522,000	0	1,522,000	
거제2동	1,050,000	0	1,050,000	1,622,000	536,000	1,086,000	
거제3동	1,000,000	224,980	775,020	1,562,000	306,900	1,255,100	
거제4동	950,000	425,560	524,440	1,522,000	734,000	788,000	
연산1동	1,050,000	998,300	51,700	1,622,000	661,120	960,880	
연산2동	1,050,000	950,000	100,000	1,622,000	210,000	1,412,000	
연산3동	1,000,000	417,870	582,130	1,562,000	435,000	1,127,000	
연산4동	1,000,000	144,496	855,504	1,562,000	258,000	1,304,000	
연산5동	950,000	60,000	890,000	1,522,000	128,000	1,394,000	
연산6동	950,000	712,120	234,880	1,522,000	297,000	1,225,000	
연산8동	1,000,000	661,500	338,500	1,562,000	384,000	1,178,000	
연산9동	1,050,000	670,000	380,000	1,622,000	398,000	1,224,000	

○ 2024년 상반기 동별 방역소독 실적

(단위:회)

구분	총계	유충구제	분무소독	연무소독	연막소독	비고
2024년 상반기	1,520	10	0	1,510	0	



붙임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마. 생략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예방과 방역

사. ~ 차. 생략

3. ~ 7.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90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 8. 생략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 17. 생략

③ ~ ④ 생략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3.

안전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안효정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제387호
- 나. 제출일자: 2024년 8월 27일
-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8일
- 라. 제 출 자: 연제구청장

2. 제안이유

진료비와 수수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반환권을 보호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종류와 수수료, 징수방법 현행화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현행화(안 제10조제1항)
- 나. 수수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안 제11조)
- 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종류 및 수수료 현행화(안 별표)
- 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명시(안 별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7. 17. ~ 2024. 8. 6.) 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4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기획감사실, 2024. 4. 24.)> 관련 규제개선 필요 과제(준조세 정비 중점과제: “기납부수수료 등의 반환규정 강화”)로 진료비와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종류와 수수료, 징수방법 현행화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 사항(2024. 11. 23. 시행)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0조(징수방법) 제1항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행화하여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 로 변경하고
 - 안 제11조(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수수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환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함.
 - 현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종류 및 수수료를 현행화하고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 1996.7.1.제정, 1999.11.25. 일부개정 7번항목 삭제

- 4.특별진단서, 5.사체검안서, 6.성별 및 연령별 감정서, 8.사망진단서, 9.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현재 발급하지 않는 항목 삭제
- 기본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 부담액 ▶ 보건소(의과)에서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본인부담액 500원
- 검사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

$$\text{검사료} = \text{상대적가치점수} \times \text{보건소 점수당 단가}$$
 - *상대적가치점수: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수시로 변경 고시)
 - *보건소 점수당 단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 2024년의 경우 93.5원
- 결핵 고위험국가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등록외국인 2022. 12. 1.부터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2016. 3월부터 외국인 치료 비순응자 ‘중점관리 대상자’로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2016년 4월부터 코로나 전까지는 매월 평균 30건 이상씩 접수, 현재는 매월 2건 정도 접수)

- 안 별표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금액 항목 신설 기존과 같이 3,000원으로 명시함.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현행〉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총리령 시행일이 2024. 11. 23.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일치시킨 것은 타당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2024년 보건소 수가

○ 2024년 검사비 수가

구분	검사종류(방법)			2024년 개정수가	보건소단가 93.5원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 (보건복지부 매년고시)
	분류번호	코드	검사명		상대가치점수 (B)	단가 (A×B)	단가 (사사오입)	
X-선 직촬	다-121가	G2101	◆흉부[직촬]Chest-1매	8,120	86.86	8,121	8,120	
	-	-	◆필름대(직촬) 14*14		0.00	0	0	
간기능검사(7종)	누-185가	D1850	◆AST (SGOT)	14,810	23.32	2,180	2,180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표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수시로 변경고시)
	누-186가	D1860	◆ALT (SGPT)		22.77	2,129	2,130	
	누-189가	D1890	◆γ-GTP		42.26	3,951	3,950	
	누-184가	D1840	◆총단백경량		16.56	1,548	1,550	
	누-188가	D1880	◆알부민		19.42	1,816	1,820	
	누-187가	D1870	◆포스포타제 - 알칼리		18.35	1,716	1,720	
	누-183가	D1830	◆빌리루빈정량 - 총빌리루빈		15.63	1,461	1,460	
간기능검사(2종)	누-185가	D1850	◆AST (SGOT)	4,310	23.32	2,180	2,180	
	누-186가	D1860	◆ALT (SGPT)		22.77	2,129	2,130	
A형 간염검사	누-701가	D7011	◆A형간염항체	17,880	191.23	17,880	17,880	
B형 간염검사	누-700가	D7001	◆B형간염표면항원 - 일반	7,150	33.12	3,097	3,100	
	누-700나	D7002	◆B형간염표면항체 - 일반		43.34	4,052	4,050	
C형 간염검사	누-700마	D7005	◆C형간염항체 - 일반	5,030	53.75	5,026	5,030	
간암표지자검사	누-421가	D1420	◆알파피토프로테인 - 일반	4,590	49.10	4,591	4,590	
매독감작혈구응집(TPHA)	누-692가	D6921	◆매독감작혈구응집	7,760	82.95	7,756	7,760	
C.B.C(빈혈검사)	누-000나	D0002	◆혈색소[광전비색법]	8,230	12.75	1,192	1,190	
	누-000나	D0002	◆헤마토크리트		12.75	1,192	1,190	
	누-000나	D0002	◆적혈구수		12.75	1,192	1,190	
	누-000나	D0002	◆백혈구수		12.75	1,192	1,190	
	누-000나	D0002	◆혈소판수		12.75	1,192	1,190	
	누-000다	D0013	◆백혈구백분율 - 혈액		24.38	2,280	2,280	
혈색소(빈혈검사)	누-000나	D2050	◆혈색소[광전비색법]	1,190	12.75	1,192	1,190	
혈당검사	누-302가	D3021	◆당검사 - 반정량	1,010	10.84	1,014	1,010	
총콜레스테롤	누-261가	D2611	◆콜레스테롤 정량 - 총콜레스테롤	1,570	16.76	1,567	1,570	
중성지방검사	누-260다	D263	◆지질 - 트리글리세라이드	3,750	40.10	3,749	3,750	
HDL	누-261다	D2613	◆HDL 콜레스테롤	7,310	78.21	7,313	7,310	
LDL	누-261라	D2614	◆LDL 콜레스테롤	7,340	78.50	7,340	7,340	
매독검사	누-691가	D6911	◆매독 반응검사[VDR, RPR, ART]	1,790	19.19	1,794	1,790	
남자성병(임질, 비임균등)	누-580나	D5802	◆미생물현미경검사 - 그림염색	4,480	34.03	3,182	3,180	
	누-220나	D2202	◆요침사현미경검사		13.95	1,304	1,300	
신장기능검사	누-230	D2300	◆요소질소[NPN 포함]	3,670	18.77	1,755	1,750	
	누-228가	D2280	◆크레아티닌		20.54	1,920	1,920	
요산(통풍)검사	누-231가	D2310	◆요산검사	2,480	26.51	2,479	2,480	
요 일반검사	누-225가	D2251	◆요 일반검사 4종	880	9.43	882	880	
요침사현미경검사	누-220나	D2202	◆요침사현미경검사	1,300	13.95	1,304	1,300	
HbA1C(당화혈색소)	누-306가	D3061	◆헤모글로빈 화합물 - 헤모글로빈A1C	8,360	89.42	8,361	8,360	

○ 2024년 제증명 수가

○ 2024년 제증명 수가			보건소단가 93.5원		
구분	산출근거	2024년 개정수가	상대가치점수	상대가치점수× 점수당단가	사사오입
윤전면허(운시,적성) 신체검사	-제증명수수료	500	6,430	500	500
	-기본진료비 타-4(W0411)	5,930		5,932	5,930
일반건강진단서	-제증명수수료	500	26,680	500	500
	-기본진료비 타-4(W0411)	5,930		5,932	5,930
	-흉부Chest 다-121가(G2101)	8,120		8,121	8,120
	-GOT 누-185가(D1850)	2,180		2,180	2,180
	-GOT 누-186가(D1860)	2,130		2,129	2,130
	-γ-GTP 누-189가(D1890)	3,950		3,951	3,950
	-요일반검사 누-225가(D2251)	880		882	880
	-혈색소(HB) 누-000나(D2050)	1,190		1,192	1,190
건강진단서	-총콜레스테롤 누-261가(D2611)	1,800	16,340	1,802	1,800
	-제증명수수료	500		500	500
	-기본진료비 타-4(W0411)	5,930		5,932	5,930
	-흉부Chest 다-121가(G2101)	8,120		8,121	8,120
외국인결핵(검진)확인서	-매독검사 누-691가(D6911)	1,790	6,430	1,794	1,790
	-제증명수수료	500		500	500
	-기본진료비 타-4(W0411)	5,930		5,932	5,9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보건소에서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매년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및 상대가치점수 조정사항 반영 제증명 및 검사수수료 변경 시행(변경사항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03호, 2024. 1. 2., 일부개정]

-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15.] [보건복지부령 제985호, 2023. 12. 14., 일부개정]

-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 1. 8.] [총리령 제1919호, 2023. 12. 7., 일부개정]

-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폐결핵
-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7.>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12. 7.>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⑥ 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 [보건복지부령 제1045호, 2024. 8. 1., 일부개정]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① 외래진료 및 고가(高價)의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생략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6. 29.>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제13조제1항 관련)

1. 생략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을 때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기관종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보건소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한방과	침·뜸(灸)·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뜸(灸)·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뜸·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뜸·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뜸·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지소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9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400원
	한방과	침·뜸·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뜸·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뜸·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뜸·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뜸·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진료소	모든 경우		900원

비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과 및 치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위 표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1일당 500원(재활 및 물리치료 본인부담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6. 28.] [조례 제1157호, 2023. 6. 28., 일부개정]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증명 등의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신용카드, 현금,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제3조의 수수료는 부산 광역시 연제구 전자수입증지를 증명서 또는 신고서에 인영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신설 2009.12.31., 삭제 2021.7.6.>

③ 생략